

ISSUES

클린턴 政府의 通信政策

姜永起¹⁾

I. 21세기 인프라프로젝트 제안과 추진

1. 제안 배경

클린턴 정부는 선거 공약의 하나로 미국내 고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교육계 등의 효율을 높이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1C Infrastructure Project」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은 고어 부통령인데, 이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현재 국가 정보 통신 정책은 과거 農政의 실패로 수많은 농산물이 부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적절한 정보 운영 정책의 미비로 수많은 정보가 사장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이는 신기술의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를 운용하는 정책의 부재로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실패해 온 미국의 경험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는 통신 산업을 향후 미국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신정부는 미국의 공중 전기 통신망 및 정보 N/W를 전국 규모로 완전히 정비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①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에 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개개인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② 신정부 특히 고어 부통령이 정보 통신 네트워크 정비가 국민 경제를 재생시키는 데에 연관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2. 프로젝트 추진

고어 부통령은 상원 의원 시절 이미 고도 통신 네트워크 구상의 실현에 큰 실적을 올린 적이 있다. 고어는 1991년 12월에 「1990년 고성능 컴퓨팅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0)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전국 연구·교육 네트워크(NREN: 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의 구축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고어는 1992년에 반스 상원 의원과 공동으로 「1992년 정보인프라·기술법안(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Act of 1992)」을 의회에 상정하여 가결에 노력했던 적도 있었다. 이 법안은 2015년까지 광섬유 네트워크를 전국에 부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던 것으로 통신 인프라법이라고도 불리 운다.

클린턴 정부는 발족 직후인 1993년 1월 21일 「21C Infrastructure Project」를 구체화 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쟁력 강화 자문위원회(Competitive Council)」이다.

이 위원회는 통신 회사, 학계, Think Tank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를라 회장인 피셔 씨가 위원장으로 있다. 고어 부통령과 Infrastructure 법안의 가결에 노력한 반스 상원 의원은 위원회의 출발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2015년까지 기업, 가정, 병원, 진료소, 학교, 도서관에서 광대역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Infrastructure 법안의 내용이 21세기 Infrastructure Project의 중요한 일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반스 상원 의원은 1993년에 재차 Infrastructure 법안 또는 이와 동일한 목적을 지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를 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I. 정보통신 분야별 주요 정책

클린턴 정부가 21세기 인프라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통신 각 분야에서 정책적 우선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1.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정보 통신 분야에서 클린턴 정부의 우선 사항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SDN(협대역 ISDN) 전개와 가속 · B-ISDN(광대역 ISDN) 전개 전략의 강화 · 네트워크 상호 접속의 촉진 · 표준화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강화 · 네트워크 신규 구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강화 · 고어 구상 I: 연구 기관 및 대학간을 NREN*으로 접속 · 고어 구상 II: NREN으로 초·중·고교를 접속
사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주의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사법권에 관한 「1934년 통신법」 개정 · FCC(미 연방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 · 공중망 정부 소유 금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을 이용하는 코드의 CAD/CAM · 통신 관련 반도체 및 LCD · 디지털 HDTV ·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무선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통신의 글로벌 전개 ·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 추진 및 PCS 도입에 대한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통신 분야의 무역에 관하여 국제간 장벽을 상호주의로 완화 · 시내 통신에의 경쟁 도입으로 공공 이익을 증대

주: NREN: 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클린턴 정부 통신에 관한 최우선 사항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정비하여 네트워크간 상호 접속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FCC는 정보 통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협대역 ISDN(N-ISDN)의 신속한 전개
- 광대역 ISDN(B-ISDN) 도입의 촉진
- 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데 타당한 방법의 도

출

- 교환, 상호 접속,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및 관리의 료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화의 적극적 추진

- 최신 또는 고도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채택과 보급 촉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어 부통령과 그의 기술 고문인 마이크 벨슨 박(MIT 출신)은 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인 NREN(National Research Education Network: 연구 교육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NREN 계획은 컴퓨터간 통신시 장애가 되는 다종 다양한 표준과 프로토콜의 문제를 해결하여 어떤 메이커의 컴퓨터에서도 NREN 인프라를 통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NREN은 우선 1,200개의 연구소, 이어 주요 교육 기관, 도서관, 대학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미국 전역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NREN은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고어가 부시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내어 당초 2년간 1,22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 받았으나 고어 부통령은 이 자금 조달액을 대폭 증가할 생각이다.

「고어 구상 II」는 공립 초·중·고교를 NREN 계획에 포함시켜 모든 공립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NREN의 기술적 기반은 거의 완벽하지만 그 도입은 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AT&T와 대통령, 연방 의회간의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정부 규제 완화 및 법규 정비

벨계 지역 전화 회사에의 규제 완화

신정부는 미국이 기술적, 경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체제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이를 달성하는 주체로는 RBOC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RBOC를 단순히 통신 사업자로써가 아니라 중요한 연구개발 집단으로서의 그 위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정부는 현재 RBOC(지역통신사업자: Regional Bell Operation Company)에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CATV, 기기 제조, 장거리 전화 사업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 목적은 RBOC에 T1 인프라스트럭처(1.5bps의 디지털 통신망)를 개선·정비시킴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해 관계자들이 연방 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맹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 관계자로는 미국 신문사연맹, 전국 CATV협회(NCTA), 정보산업연맹(IIA), RBOC의 기기 제조에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전기통신연맹(TIA) 등이 있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반발을 대비해 신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신기술, 신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감가상각 방법을 우대한다든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요금 정책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 상태이다.

FCC는 현행 감가상각 방식은 전화 회사의 요금이 報酬率規制²⁾에 의해 결정된 시대에 설정된 것이므로 價格上限方式³⁾에 의해 요금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판단하여 報酬率規制로 인하여 전화 회사가 안고 있는 부담과 경비의 경감을 위해 이를 개정

하기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화 회사는 연간 3,500~5,000만 달러(전화사의 경비 총액 중)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근대화의 촉진을 겨냥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개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도기술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낭비라는 의견도 있다.

FCC가 제안한 4가지 방식 중 다음의 ①, ②, ③은 FCC가 감가상각법을 표시하는 것에 반해, ④는 전화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① 전기 통신 시설의 감가상각시 반드시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연수와 잔존 가격 등 널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 요소만 표시한다.

② 각 전기 통신 시설에 대하여 일정 폭의 감가상각률을 표시한다.

③ 전기 통신 시설에 대한 투자를 100% 회수하는 기간을 각 시설마다 결정한다.

④ 전화 회사는 감가상각률의 변경시 이를 공시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구한다. 공시 산정시 데이터는 게시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대형 시내 전화 회사의 현재 보유시설 총자산은 2,400억 달러 이상이며, 1991년 감가상각 총액은 180억 달러이고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였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률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가 요구되고, 심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 없게 되어 전화 회사의 감가상각 방법이 보다 실제적으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聯邦과 州政府의 管轄權을 재검토

신정부는 연방과 주 정부의 정보 통신 분야 관할권 범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 聯邦과 州政府의 管轄權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 전기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하고 있는 「1934년 통신법」이라는 법률에 그 원인이 있다.

「1934년 통신법」에서는 聯邦側の FCC에 국제 통신, 州際通信, 기기 판매에 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州內通信은 州政府에 管轄權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연방과 주 정부간의 정책 갈등을 야기시켜서 연방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FCC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면 이에 불복하는 州政府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CC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이 재판에서 뒤집히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가 제3차 컴퓨터 裁定에 관해 FCC를 제소한 것이 있다. FCC는 요금을 간소화하여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재판소는 이러한 FCC의 시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는 통신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1934년 통신법」은 급속한 기술 진보로 고도화·글로벌화되고 있는 유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부문이 많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는 '93년 중에 연방의회, 州規制機關과 「1934년 통신법」의 개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신법의 개정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하원의 정보 통신 소위원회가 통신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격렬한 논의만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유보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와 의회가 협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FCC의 정책적 지도력 강화

신정부의 모든 관계자는 FCC가 미국의 통신 산업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FCC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정보 통신 인프라를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클린턴 정부의 기술·경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신정부의 수석 보좌관에 의하면 RBOC에 의한 N-ISDN의 준비는 현재 기대한 만큼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공중 통신의 니즈의 대부분은 시내 전화 회사가 도입하는 N-ISDN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FCC가 연구할 부문은 현재 공중망(PSTN)을 Grade-up시켜 일반 유저가 음성, 데이터, 화상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내 전화 회사가 N-ISDN 서비스의 전개를 가속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도 FCC에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의 통신 시장 개방을 가일층 요구하기 위해 FCC에 전통적인 규제권만 아니라 타행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 외교 분야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정보 통신 인프라는 민간 소유로 정부 지원은 확대

미국 업체 TOP의 일부는 클린턴 정부가 통신망을 정부의 소유물 즉 공적 소유로 하는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클린턴 측근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클린턴과 고어는 미국 정보 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신망은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대규모 유저로서 주운을 하는 권리만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의 통신 기술, 통신 산업의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은 정보 통신 산업의 Grade-up을 도모하고, 인프라 준비를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원이라는 의미는 미국 정부가 정보 통신 인프라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산업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자국의 정보 통신 인프라의 Grade-up을 위해 산업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도 수요 증진의 정책에서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인프라의 현상을 재조명하여 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NREN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NREN을 강력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 통신에 경쟁 도입

클린턴 정부는 시내 통신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 상태인 시내 통신을 경쟁 상태로 이행시킬 경우에는 RBOC의 경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정권은 일반 유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의 자산 즉 공중 통신망도 파괴하지 않고 시내 통신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 통신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즉 자동차/휴대 전화, 위성에 의한 직접 접속, 光 Fiber Cable로 대규모 유저를 직접 연결하는 경쟁적 접속업자 (CAP : Competitive Access Providers, Bypass업자)의 출현, 光섬유망의 건설에 의한 쌍방향 음성·데이터 통신의 이용에 관심을 지닌 다수의 CATV회사, 게다가 FCC가 조사중인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에 의한 경쟁의 증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3. 관심 기술 분야

클린턴 정부의 통신 정책이 선거 공약에 따라 실시된다면 부시 정권 시절보다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전개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에서는 협대역 ISDN서비스의 실시가 계획보다 수년이 지연된 것은 표준화와 시내망의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일관해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N(Intelligent Network), 광대역 컴퓨터·Super-highway의 도입, PCS에 의한 무선 통신 서비스의 보급도 지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클린턴 정부는 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이 용이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92년 전화 회사가 소유 운영하는 전화 회선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VIT(Video Dial Tone) 서비스를 인정하여, RBOC는 CATV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정부는 FCC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CS에 관해서는 주파수 할당을 경쟁 입찰제로 하여 보급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대역 네트워킹

신정부는 새로운 정보 통신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기존의 시내망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그룹의 서비스와 기술이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HDSL: High Digital Subscriber Line) 및 非同期디지털가입자회선(ADSL: Asynchronous Digital Subscriber Line)이고, 다른 하나는 N-ISDN이다.

HDSL과 ADSL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혼합하여 전송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 및 신호 프로토콜이 정비되어야 한다. 뉴저지주 유니온시의 공립학교 등에서 실시한 ADSL 실험에서 TV 신호, Graphic 및 음성을 기존의 전화 회선을 통해서 가입자까지 전송할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다. 이는 기존 인프라의 이용이 가능하고, ISDN의 활용을 통하여 광대역망의 기능을 단기간에 보다 많은 유저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유용한 통신 수단이다.

광대역 네트워킹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非同期傳送모드) 교환 시스템은 당초 SONET(同期式 光纖維網: Synchronous Optical Network)에 의한 각종 혼합된 데이터를 교환·전송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고속 패킷 네트워크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ATM은 RBOC의 기업용 Private Network간 상호 접속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SONET과 NREN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광대역 N/W의 형성되면 RBOC는 LATA(Local Access and Transport Area)내, LATA間 양방으로 SONET의 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ATM으로 교환하고, 광섬유 MAN(Metropolitan Area Network)간 접속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각 지역 CATV업자의 디지털 HDTV 신호의 전송 실험이 이 인프라 상에서 시작될 것이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ATM과 SONET의 경제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ONET 기기와 ATM 교환기가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유수 통신업체는 SONET 기기 생산과 ATM 교환기의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 고어 부통령이 전국 규모의 광섬유망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에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은 향후 4년간 현

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4. 대외 정책

대외 정책 방침은 미국의 통신 사업자와 기기 제조업체가 세계 각국 시장에서의 진입을 보다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일본과 유럽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과 유럽은 공히 정보 통신 서비스와 기기가 옵션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무역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보호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외 정책의 주목적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활동이 해외 각국의 정책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92년 EC가 개정한 통신 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 규정에 전면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현재 EC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93년 3월 22일을 시한으로 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GATT를 탈퇴하여 상호주의에 의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초강경책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대외 정책을 '93년 후반에 구체화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III. 업계 반응

클린턴은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임 전 아칸소주 Little Rock에서 「경제 Summit」을 개최한 바 있다. 「경제 Summit」에 참여한 전자 및 통신 관련 업계 대표들은 신정부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부분의 업계 대표들은 민간 투자의 확대, 정부의 산업계 지원이라는 클린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였다.

1. 전자업계의 반응

인텔 사장인 고던 무어는 단기 이익에 너무 치중하지 않게 하는 조세 정책, 장기 자금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상업적 프로젝트에 정부 연구 기관의 더 많은 개입을 요구하였다. Xilinx 사의 대표인 Bernie Vonderschmitt는 신정부에 자산 매각 소득세의 삭감,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금을 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짧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민간 부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이전시키고, 예상되는 시장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클린턴/고어에게 어떠한 새로운 규제 또는 수입 쿼터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규제 및 수입 쿼터제는 공정 무역을 강요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미국 경제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HP의 대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Bob Kirkwood는 신정부는 응급 처치식 경제 정책의 운용을 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일본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Bell Research Corp. Inc.의 대표인 George H. Heilmeier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것보다 나은 해결책은 효과적인 기업간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소인 자본과 인력은 제품화 초기 단계부터 배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술을 수혜하는 기업과 이전하는 기술의 소유자를 조기에 구분하여, 양자 모두에 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에 제품화를 실현하여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완벽한 제품의 질과, 비용/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스톤 소재의 Teradyne Inc. 대표인 Alex d' Arbeloff는 하이테크 특히 반도체에 그 힘을 집중하고 있는 신정부의 하이테크 산업 지원 정책의 성과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정부 지원에 앞서 기업들이 TQM(Total Quality Management)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 내부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인이지 정부의 지원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힘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기업의 浮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TI의 정부 관련 업무 부사장인 John Boidock는 정부는 새로운 플랜트와 기기에 대한 투자액에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연구개발비에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장하되, 그 비율은 총 R&D에 기준으로 25%가 적당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2. 통신업계의 반응

정책반응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 12월 14일~15일 아칸소주 Little Rock에 300명의 경제인, 학자를 초청하여 개최한 「경제 Summit」에 다수의 통신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MFJ(修正同意判決: Modified Final Judgment)⁴⁾의 폐지, 통일된 통신 정책의 확립, 90년대 말까지 광섬유망을 보급하기 위해 전화 회사와 CATV 회사간 협조의 필요성 등 전기 통신 업체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다. Washington D. C. 에 있는 Bell Atlantic 사장인 Del Lewis는 통신부문에 민간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RHCs는 MFJ 하에서 장거리 서비스, 기기 제조, 각종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클린턴 고어에 재차 인식시켜 주었다.

PecTel Corp.의 마케팅 임원인 Carl Masi는 신정부가 경제적이고 활용에 편의성을 고려한 ISDN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비디오 회의와 같은 기술을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사업의 촉진을 요구하였다.

경제 Summit는 전반적으로 차기 정권 수속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시내 및 장거리 전화 부문 까지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통신 서비스 사업을 조기에 경쟁 체제로 전환시켜 통신 서비스 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자체가 시내 전화와 장거리 전화를 경쟁 체제로 가는 경우, 이러한 기준 하에 타국가에 대해서도 경쟁 체제 형성과 개방 요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80년대 초반 그 동안 독점으로 운영해 오던 미국내 통신 사업을 경쟁 체제로 유도하고 타국가에 대해서도 경쟁 체제 구축과 함께 타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내 수요 충족에 노력해 왔으나 향후에는 국내외 시장 개방 추세에 맞춰 서비스와 기기 공히 해외 진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시급히 마

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는 국내 통신 정책이 국내 통신 서비스 확대와 기기 수요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대 들어서 교환기 등 일부 국내 통신기기 수요 감소와 국내외 통신 시장 개방 추세에 맞추어 국가 전략 산업인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연적 상태가 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업체의 경우 기존의 국내 방어적 입장의 전략 전개에서 벗어나 선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의 원초적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통신 기기 가운데 국설 교환기의 해외 수출은 제반 통신 기기 해외 진출의 거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정부정책상 해외 진출 지원 강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통신 서비스 확대에 따른 파생되는 기기 수요의 효과를 국내 업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의 경쟁 체제 도입 및 새로운 통신 서비스 도입이 결정될 때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기기 수요를 국내 업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여 제조 업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의 경우 국내 소요되는 통신 시스템의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시스템 개발에 시간과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위험 부담이 큰 부문은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되, 중기 및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의 경쟁적 개발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가의 정보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체제는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상 정부 출연 연구소와 민간 연구 부문의 역할 구분을 강조하되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 관련 연구소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업화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원천 기술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 기술 수준의 Take-off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 연구소들은 상품화 및 실용화 연구보다는 기반 기술, 즉 원천 기술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통신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산업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 부문과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통신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통신사업자(BOC)들의 위상 변화와 해외 진출, 통신 기기 시장 구조에 관련된 통신기 제조업체들의 전략 변화, 통신 부문 대외 시장 개방 정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시장 보호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설정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

주석1) 三星經濟研究所, 産業 1 팀장

주석2) 報酬率規制(Rate of Return Regulation)는 통신 사업자 등 공익 사업자의 요금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규제로서 규제 기관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본 수익률을 공정 보수율로 두고, 통신 사업 자산에 이를 곱한 것이 공정 보수 즉 이익됨. 이에 감가상각 및 세금을 더한 광의의 영업비를 원가로 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만의 수입에 기초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미국은 1965년부터 적용).

주석3) 價格上限方式은 요금 설정시 물가 상승률 등에 기초하여 상한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報酬率規制를 대체하여 미국 통신 사업자에 채용되고 있다. FCC는 1989년 1990년에 AT&T가 제공하는 장거리 요금 및 시내 전화회사가 제공하고 장거리 전화회사가 이용하는 시내 Access Service요금에 報酬率規制를 대체하여 채용하였다.

주석4) MFJ(修正同意判決:Modified Final Judgement)는 '74년 미 법무부가 AT&T의 시내 전화 및 장거리 전화 시장에 독점적 행위에 대한 反獨禁法(Anti-Trust) 제소에 대하여 1982년 8월 24일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주요 내용은 AT&T 분할과 RBCCs에 대한 경쟁 분야 즉 장거리 전화, 정보 서비스, 기기 제조 분야의 진입 규제이며 그 효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